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제 3차 토론회



2009년 8월 21일(금) 13시

여성플라자 회의실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제3차 토론회

2009년 8월 21일
여성플라자(대방동)

취 지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진보정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사회당)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또한, 외부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함.

프 로 그 램

1부 (13:00~15:00)	1) 인사. 소개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 최동준 민주노동당 정치위원장 ① 참가조직 인사 및 소개 ② 경과보고 : 통추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 정갑득 통추위 위원장(금속노조 위원장) ③ 질의. 응답
2부 (15:00~16:30)	2) 주 발제 및 토론 (1시간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정영태 인하대 정치학교수 ○ 발제자 :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발제시간 10분 이내) * 발제내용 : ① 이명박 시대, 진보정치세력 역할과 단결의 필요성 ② ‘단결과 통합’의 각 정당의 입장 및 방안, 선거대응 전략 - 민주노동당(최규업 새세상 연구소 소장) - 진보신당(이용길 부대표) - 사노준(장혜경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 사회당(안효상 정치학교 교장) ○ 토론자 :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 제출(10분 이내) - 윤태곤 프레스안 기자 - 손혁재 경기대 교수 - 장시기 민교협 상임의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자, 토론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시간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제자, 토론자 의견에 대한 질의 응답 ② 청중의견 제출 및 전체토론 	

통추위 보고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

- 통추위 구성경과 / 4쪽
- 통추위 사업경과 보고 / 5쪽
- 통추위 하반기 사업계획 / 6쪽

1.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 구성 경과

1) 제45차 정기대의원대회(2009. 01. 21)에서 2009년 정치.연대 사업계획으로 진보정당 세력의 통합추진 건이 확정됨

2) 제45차 정기대의원대회 시, 금속노조 정갑득 대의원 외 96명이 서명 발의한 “진보정당 통합권고 결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회의 유예로 다루어지지 못함.

<참고1 : 2009년 민주노총 사업계획 - 제45차 대대자료집 P144>

- 제 진보세력의 대단결을 요구하고 있는 정세적 측면과, 당분일 이후 조합원들 속에 확산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한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불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집권운동에 대한 진일보한 전망을 세워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다해야 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수임단위를 구성하여 추진함.

3)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2009. 3. 5)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수임단위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 구성 건을 확정함.

4)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2009. 3. 19)에서, 통추위 구성을 확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함.

<참고2 : 통추위 구성 및 사업계획 - 제8차 중집자료 P8>

- 1) 통추위 운영방안 및 운영시한 확정 : 2009년 연말까지 운영함.
- 2) 주요 사업계획 확정 : ①제 진보정당 방문 및 간담회 개최 ②단결과 통합을 위한 추진 논의 기구 구성(TFT 구성) ③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④기타 여론조사사업, 선언운동 등의 방향성 안을 확정함

[참고3 : 현재 통추위 구성원 - 표]

소속	직책	성명	전화	역할
금속노조	위원장	정갑득	011-835-2480	추진위원장
총연맹	정치위원장	최동준	011-270-4685	집행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	마화용	010-5186-7858	추진위원 진보4당 TFT운영
전교조	부위원장	박석균	010-3351-5034	추진위원
보건의료노조	정치위원장	홍명옥	010-6265-4581	추진위원
전국 공무원	정치위원장	제창록	011-9069-9197	추진위원
경남본부	수석부분부장	김재명	010-4645-1832	추진위원
광주본부	수석부분부장	백정남	019-608-4640	추진위원
인천본부	본부장	전재환	010-3739-3506	추진위원
금속노조	민주노총 2010 기획단장 (금속노조기획실장)	박유호	016-585-9681	간사
총연맹	대협국장(정치담당)	엄미경	010-8308-6586	간사

2. 통추위 사업경과 보고

1)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 회의진행

- > 1차 회의 : 3월17일 (통추위 구성 및 사업계획안 확정함)
- > 2차 회의 : 4월17일 (통추위 4-5월 세부 사업계획 확정함)
- > 3차 회의(수련회) 6월24일 (진행경과 평가 및 통추위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함)
- > 4차 회의 : 8월10일(통추위 하반기 당면사업 집행계획 확정함)

2) 통추위 토론회 진행 과정

- > 통추위 1차 토론회 : 5월28일(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내부 의견 수렴)
- > 통추위 2차 토론회 : 7월8일(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현장조직별 의견 수렴)
- > 통추위 3차 토론회 : 8월21일(진보4당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진보진영 의견수렴)

3) 제 진보정당과의 교류, 의견수렴 과정

- > 제 진보정당 방문 및 지도부 간담회 진행(통추위 구성취지 및 사업계획 설명함)

- ① 민주노동당 : 5월27일(수) 10시~12시
- ② 진보신당 : 5월28일(목) 12시~13시40분
- ③ 사회당 : 6월11일(목) 10시~11시40분
- ④ 사노준 : 6월11일(목) 15시~16시30분

- > 진보4당 TFT 구성을 위한 과정

- ① 진보4당 TFT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 : 7월10일 (민주노총 통추위와 진보4당 TFT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및 의견수렴)
- ② 진보4당 TFT 1차회의 : 8월18일(TFT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확정함)
 - * 별첨 : 진보4당 TFT 회의결과에 따른, TFT구성과 운영방안 첨부함

3. 통추위 하반기 사업계획

1) 사업목표

-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사업 추진
- 민주노총의 정치적 단결과 현장중심의 제2 정치세력화 추진동력 확보
- 노동자 계급 중심, 진보대연합 실현으로 노동자 민중집권 시대의 전망 공유

2) 사업방향

- 현장중심, 조합원 주체의 제2정치세력화 결의와 집권의 신심을 높여냄
- 단계적 사업으로 민주노총 내부 조직적 공감과 사업추진 동력 확보(민주노총 중심성 강화)
-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민주노총과 제진보정당세력 및 제진보정당세력 상호간의 신뢰구축
- 제진보정당세력의 실질적 통합 계기 마련과 추진일정을 확보

3) 추진 로드맵

- 1단계(모색기)
 - * 통추위 구성과 민주노총 조직내부 공감 및 제진보정당 세력 공유(토론회 및 TFT 구성 등)
- 2단계(추동기)
 - * 산별연맹, 지역본부 순회 간담회
 - * 민주노총 대중적 ‘단결과 통합’ 촉구 운동전개(서명, 선언운동 등)
 - * 제진보정당과 함께하는 TFT 운영과 ‘단결과 통합’ 관련사업 진행, 추진일정 합의 모색
 - * 제진보정당 세력 ‘단결과 통합’ 추동, 제진보시민사회 세력 공감대 형성 확산 (모색)
- 3단계
 - * 민주노총, 산별, 지역본부 ‘단결과 통합’ “제2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 * 제진보정당 통합추진 조직 구성
 - * 제진보시민사회 세력 관련사업 추진 (검토)

4) 단계별 사업계획

(1) 1단계 사업(3월 ~ 7월)

- 통추위 구성, 운영
- 내외부 토론회: 3차례 토론회
- 진보정당 간담회와 TFT구성

(2) 2단계 사업(7월 ~ 9월)

- 산별연맹, 지역본부 순회 간담회
 - * 7~8월중 집중 간담회 진행(세부계획: 정치위원회 준비)
 - * 산별연맹 중집과 지역본부 운영위 결의로 추진(주최: 통추위, 주관: 연맹,본부 정치위원회)

□ 여론 조사사업

* 9월중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민주노총 대위노조 대표전화를 표본으로(노조간부 대상으로) 진행

* 설문문항 및 세부계획안 첨부(1) 참고

□ 민주노총 9월 임시대의원대회, 통합관련 결의 추진

* (9월10일)임대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 진보정당 통합 촉구 민주노총 선언' 추진.

- 이명박정권 퇴진과 진보적 대체(안)정당을 위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선언하고, 연동된 사업 결의

*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조합원 선언. 서명운동 결의(선언문 초안 첨부(2) 참고)

□ 조합원 서명 및 간부 선언운동 추진

* 조합원 이명박 불신임 투표와 연동하여 추진(9-10월 중 추진)

* 선언, 서명운동 관련 조합원 교육을 배치한다.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사업을 조합원까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 홍보사업을 정치위원회와 긴밀히 연동하여 배치함)

* 세부계획안 첨부(3) 참고

□ 언론, 선전사업

* 통추위 주요활동에 대하여 '노동과 세계' '홈피' 게재와 산별에서 홍보를 신속히 한다.

* 주요사업관련 언론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담당자 선정, 사전사후 보도자료, 브리핑)

□ 제진보정당 대상 사업

* 지역본부에서 제진보정당 지역조직의 단결 통합관련 공동사업 전개(연석회의 등)

* 각 진보정당 공식논의 단위에서 '단결과 통합 사업' 관련 공식 논의 주문

* 각 진보정당 공식기구(예, 중앙위원회 등)에 당원대상 호소문 등 발표, 선전물 배포
-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으로 노동자 민중집권시대를 함께 열어가자!'

* TFT에서 논의하여 추진

□ 제진보세력 대상 사업

* 진보연대, 공투본, 진보진영 주요인사 등 진보시민사회세력 지도부 간담회 추진

* 진보정당 간담회 추진방식과 동일하게 추진

(이후, 진보정당 단결과 통합사업 관련 지지선언 조직과 관련사업 참가 등)

□ 기타 사업

■ 필요시, 민주노총 9월 임대에서 '진보정당세력 단결과 통합' 사업관련 결의추진

(3) 3단계 사업(9월 ~12월)

- * 민주노총, 산별, 지역본부 ‘단결과 통합’ “제2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 * 제진보정당 통합추진 조직 구성, 구성완료(12월)
- * 제진보시민사회 세력 관련사업 추진 (검토)
- * 이후 세부계획 논의

<통추위 하반기 시기별 사업계획(정리표)>

일정별	사업계획	사업내용
7~9월	① 통추위 3차 토론회 ② 산별/지역 순회 간담회 ③ 여론 조사사업(첨부1) ④ 대의원대회-결의문 채택(첨부2)	->제진보정당,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 산별 (현장)의견수렴 및 통추위 사업 경과 보고 ->대대결의를 통해, 의지천명(재확인)
9~12월	① 조합원 서명 및 간부 선언운동(첨부3) ② 민주노총/산별/지역본부 ‘단결과 통합’, ‘제2정치세력화’ 추진위원회 확대 구성 ③ 제진보정당 통합추진 조직 구성 또는 구성완료(12월)	->현장(기층)의 힘으로 ‘통합과 단결’ 실현 (강제) ->‘기구’구성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재도약 기회마련
진보4당 TFT 운영 방향	① 제진보정당, ‘통합과 단결’을 위한 지역순회(의견취합 및 대안마련 논의) ② 제진보정당, ‘통합과 단결’을 위한 준비기구 구성(12월까지~)	->지도부 교류사업 등 ->공동명의 선언문, 선전사업 추진 ->‘단결과 통합’의 각 정당 방향, 문제의식 공유 및 자기 사업계획 공유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 사업 등 ->10월 재보궐 선거 공동 대응 등

[별첨1 : '진보정당 대단체 TFT' 구성과 운영방안]

- * 밑줄친 단락은, 진보정당TFT에 대한 통추위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임.
(TFT 1차회의 결과에 따른 구성과 운영방안)

1) 성격

-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세력의 대단체를 위한 연대와 혁신에 동의하는 제진보정당이 함께하는 소통기구
- 진보정당세력의 대단체를 위한 사업관련 제반 논의기구
- 진보정당세력의 대단체를 위한 제반사업 추진 실무논의 단위

2) 명칭

- (명칭)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진보정당 세력 대단체를 위한 TFT"
(약칭) 진보정당 대단체 TFT

3) 운영

- 격주 1회 운영을 하되, 통추위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
 - * 각 당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
- 운영기간
 -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질적 발전(각 당 준비기구 구성 등)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기본적으로 2009년 12월까지로 함
- 참가단위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
 - 참가하는 진보정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논의를 열어두고 운영함

4) 사업내용(논의)

- 진보정당 대단체를 위한 지도부 교류사업 등 대단체 관련 제반사업
- 정세요구 공동명의 선언문 선전사업 등 가능한 범위내 참가단위 조직 동의된 사업
- 진보정당 대단체 관련한 각 정당의 방향과 문제의식 공유 및 자기사업계획 공유
- 각 당 제안사업,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관련 사업 등
- 기타사업(10월 재보궐 선거 공동대응 등)

[첨부1.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간부 여론조사]

1) 목적

- 단위노조 대표(또는 간부)를 대상으로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여론 분포도를 확인하여 기층의 힘과 의지로 진보정당의 통합을 촉구하고자 함.

2) 여론조사 시기 : 9월1일(화)~9월4일(금) 3일간 진행

- 결과발표 및 결의문 채택 : 9/10(목)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3)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민주노총 통추위의 활동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 및 간부들의 정치의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 사항과 진보정당세력의 분열 인지 정도, 민주노총에 미치는 영향, 통합과 단결 에 대한 요구, 민주노총의 정치활동 방향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사 내용
1. 기초 항목 2. 설문조사 내용 * 전문여론조사 기구와 논의하여 최종 확정예정임.

3. 통계 방식
1. 지역과 연맹으로만 통계 2. 노동조합 직책에 따른 통계 3. 나이에 따른 통계 4. 지지 정당별 통계

4. 조사 기관
1. 조사 주체: 민주노총 통추위 2. 조사 기관: 통추위가 선정한 전문여론조사 기관(한길리서치 예정)

5. 조사 설계	
1. 대상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간부
2. 조사 기간	2009년 9월 2일(수) ~ 9월 4일(금) 3일간
3. 표본 크기	1,000명
4. 표본추출방법	단위노조 대표전화(사무실 전화)
5. 자료수집방법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4) 설문문안(초안) 생략함.

- 통추위 제4차 회의에서 설문문안(초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추후 전문여론조사 기구에 상담 후 최종 수정문안을 공유하는 것으로 함. (전문여론조사 기구의 조사방식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함)

[첨부2. 9.10 민주노총 임시대대 선언문 채택]

1) 사업개요

① 목적

- 민주노총 대의원의 결의로, 진보정당 세력간 단결하고 통합 할 것을 촉구함
- 민주노총 대의원이 앞장서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천할 것을 선언함.
-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민주노총이 실천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며 통추위 하반기 사업을 힘있게 결의함.

② 선언문 제출단위 : 민주노총 집행부(* 통추위->정치위->상집.중집 결의 후)

③ 기타 : 9.10 대의원대회 선언문 채택 이후, 조합원 10만 선언, 서명운동으로 전개함.

2) 선언문 내용

- 생략(8.20~2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내용 보완하여 확정할 예정임)

[첨부3. 조합원 선언, 서명운동 전개]

1) 목표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을 호소하는 10만 조합원 선언, 서명 달성!

2) 목적 : 선언 의의

- 노동자가 정치세력화의 주체임을 확인
-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진보정치를 실현
-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힘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
- 조합원이 진보정치의 주인임을 자각, 확인
- 조합원, 현장의 힘으로 진보정당의 분열을 극복
-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확인

3) 선언(서명) 시기 : 9월~10월

4) 선언(서명) 방식

- ①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동의하며, 조합원 결의방식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함.

■ 노동자 정치세력화, 집권을 실현할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 요구

연 맹	노동조합	지 위	이 름	서 명

- ② 언론홍보,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전개함. (지역본부 정치학교 진행시, 교육배치 및 다양한 선언방식을 결합하여 진행함)
 - 단위노조 대자보(포스터) 부착, 총연맹/산별연맹 기관지 홍보, 홈페이지 홍보 등

5) 취합방식(최종취합 및 기자회견)

-> 민주노총 전 조직을 발동하여, 10만 이상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함.

① 취합 : 1차(9월30일 수요일 오후5시) / 2차 최종마감(10월16일 금요일 오후5시)

② 발표방식 : 10월 중.하순 지도부 기자회견 방식으로 '통합과 단결'을 촉구함.

발제문

진보4당 발제순서

(가나다순)

- 민주노동당 :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 / 15쪽
 - 사회당 : 안효상 정치학교 교장 / 18쪽
- 사노준 : 장혜경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 21쪽
 - 진보신당 : 이용길 부대표 / 31쪽

발제1. 민주노동당

최규업 / 새세상 연구소 소장

참다운 진보대연합을 위하여 !

1. 진보정치대연합 관련-민주노동당 제1차 정책당대회 결의문 (발취)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하자.

통일단결은 승리의 비결이며 진보정치세력의 대연합은 민중의 여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을 바라는 노동자 민중의 여망에 부응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진보정치대연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연합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전략적 지지층 강화사업과 당원 확대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0월 재보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조기 가시화한 다음,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실현하자.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제 정당, 정치조직, 민중·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을 총망라하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추진하자. 민주노동당이 진보원탁회의, 공동토론, 공동실천 등을 적극 추진하자.

당의 독자활동과 반신자유주의연대를 기본으로 반MB 공조 결합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보수개혁정당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인가. 진보의제의 부각과 독자적 당 활동, 반신자유주의 연대를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중도 야당들과의 사안별 반MB 민생개혁 입법, 정책 공조를 결합하는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하여 반MB투쟁에 앞장서며 반MB연대연합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보 개혁적 후보가 복수 출마한 경우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추진하여 향후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며,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연합-선거연합을 추진하여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자.

2. 민주노동당은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세력’- ‘민주평화 통일세력’ 과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와 성격은 진보대연합을 하지 않고 진보진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한 반한나라당 전술을 통해서 진보적 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민주노동당은 ‘반신자유주의 세력, 반제민족주의 세력, 민주 평화통일 세력’과 일상적으로 사업을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한 상층 연대를 성사시켜 우선 대중운동과 주요 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성사시킨다.

진보대통합은 ‘반신자유주의 민중운동’, ‘평화통일운동’, ‘시민운동’, ‘녹색운동’ 등의 동맹이다. 분단이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통일세력은 진보세력에 포함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진보원탁회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0 지방선거, 2012 총선과 대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 재창당을 추진한다. 아래로부터의 재창당, 대중과 함께하는 재창당의 원칙을 수립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세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조직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선의의 경쟁’과 ‘상호 협력’을 병행하며 ‘정책연대’에서부터 ‘선거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사례를 연대의 모델로 발전시킨다.

2012년 총선 전에 강력한 진보대연합을 성사시키고, 이를 주축으로 삼아 이명박 - 박근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해야 한다.

진보진영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단결하면 중도보수 진영을 견인할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권력창출단계에서 진보적 권력교체가 가능한 범 진보적 후보를 현실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 ‘ 10 대 집권전략 구성 ’]

1. 한국사회는 현상적으로는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적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다.
2.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한다.
3.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4.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5.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적합하고,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입각해서도 우월한 것으로 입증된 ‘대통령중심제’를 지향한다.
6.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기치는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생태’를 결합한다.
7.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당면 목표는
① 10만 당원 확보 ② 2010년까지 지지율 20% 쟁취,
③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집권의 축 형성, ④ 2012년 원내교섭단체 확보 등이다.
8. 민주노동당은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세력’ - ‘민주-평화통일세력’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9. 민주노동당이 민중과 하나가 되면 ‘2017년’ 집권을 쟁취할 수 있다.
10.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다.

발제2. 사회당

안효상 / 정치학교 교장

이른바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사회당의 잠정적 입장

1. 상황 인식

-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동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 및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위기는 '진보 정치' 세력에게 새로운 상황 인식을 요구한다.
- 이는 한국의 현대 정치의 지형도를 이루었던 '53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라는 3중의 체제의 작동, 한계, 변형에 근거한다.
- 냉전 종식 이후 53년 체제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사태임이 드러났지만,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현실적인 규정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미완의 '국민 국가'의 '완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이다.
- 87년 체제는 이른바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취, 즉 국민 주권의 한 가지 행사 방식으로서의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명문화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최소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의제 일반이 가지고 있는 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자유와 쌍을 이루는 경제적 자유 속에서 진전된 경제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 일반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 97년 체제는 국민의 주권 행사 및 국민적 통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유한 전략이자 국면인 '신자유주의'의 노골적인 관철 속에서 현상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낳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해체를 가속화했다.
-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위기 및 경제 위기는 단순히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인 정권 교체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만도 아니고, 경기 순환의 한 국면도 아니다. 도리어 현재의 이중의 위기는 특유한 역사적 국면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과거회귀적인 비판이나 목표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이중의 위기라는 말이 분석을 대신하는 수사가 아니라 것, 따라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와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동시에 교차해서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새로운 대안의 모색

- 19-20세기에 구현된 근대 정치의 저항적 형태는 반자본주의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제국주의로서의 민족주의/ 민족 해방 투쟁이었다.
- 이러한 두 가지 주류 저항 정치는 주로 국가 정치를 중심으로 순환하였고, 여기에 더해 특유의 목적론적 역사 철학에서 기인한 잠정적 보편성의 절대화 속에서 도리어 해방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억압을 낳았다는 20세기의 아이러니를 체현하였다.
- 이러한 역설에 마주한 해방의 열망이 20세기 후반 다양한 소수자 운동과 정체성 운동으로 터져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들은 현재까지 보편적인 구성의 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운동의 게토화 혹은 지배적인 것으로의 편입, 이외에 다른 포지티브한 결과를 낳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러한 운동이 가지는 비판적 준거점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이자 목표는 기존의 진보 정치가 노정했던 신학적 담론 구조에서 탈피하여 현실적, 세속적 과제를 중심에 놓는 것과 대중 혹은 시민의 정치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 사회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배제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을 과제로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위기 해결을 촉구한다. 물론 이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사회당의 정치적 시도이며, 이러한 시도가 다른 정치 세력 및 대중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3. 진보 정치 세력의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에 대하여

- 조직된 노동자에 기반을 둔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정치적 시민권의 획득은 한국 정치와 사회를 끈질기게 규정해 온 53년 체제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진보 정치는 합법적인 체도와 의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
- 하지만 교두보를 넘어서서 전진하기 위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제도 정치의 확장을 위한 정치 개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조직된 노동자라는 틀을 넘어서는 대중적 정치의 구현이었다. 이 두 가지는 그동안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진보 정치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하나의 큰 노조'라는 노동자 운동의 오랜 꿈은, 그러한 과제가 가진 일반적 어려움 이외에 97년 체제 속에서 좌절했으며,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자주적인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 운동이 가진 역사적 한계 속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당의 재구성 노력과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확장 노력은 서로를 강제하고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 진보를 자임하는 여러 정치 세력은 올바른 상황 인식에 입각한 과제의 도출을 중심으로 단결과 통합의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제도의 개선, 현안에 따른 공동의 조직화, 선거 연합 등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할 때만 의미 있는 통합의 화학적 결과물을 낳을 수 있을 것이

다.

-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정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대중 조직으로서, 미래지향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형성의 촉매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진보 정치 세력의 구성 가능성

- '진보의 위기'라는 시대적 지반 위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위기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위기와 투쟁, 제도적 정치 일정으로서의 2010년 지방 선거를 앞둔 진보 정치 세력에게 대중에게 현실적 힘과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단결과 통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물론 그 전제와 과정은 기존의 진보 정치의 공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 진보 '정당'이라는 운동 형태의 직접적인 목표가 권력의 획득이라면, 이를 위한 전망이 단결과 통합을 위한 준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치 세력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 혹은 윤리적 태도와는 별도로 중기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 진보 정치 세력을 그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진보 정치 세력이 구성하고 대중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기적인 정치 프로그램은 이른바 경제 강령 혹은 대안적인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놓아야 한다. 이는 진보 정치가 가진 전통적인 저항의 능력에 더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제도 정치에 진입하고 새로 구성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통로라고 본다면, 정치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진보 정치 세력의 중요한 공동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정치 제도 개혁 노력은 각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대중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대중의 전반적인 삶의 질 속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 이렇게 이성의 목소리를 듣고, 이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함께 공동 행동의 경험 속에서 정서적 만남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자유의 침식에 맞서는 저항,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이다.

- 끝으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진보 정치의 논의 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책을 앞에 놓고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제3.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장혜경 /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이명박 시대, 진보정치세력의 역할과 단결에 대하여

1. 이명박 시대, 진보정치세력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몇가지

(1)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① “아무 것도 하지마라!”

○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자민중의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오죽하면 08년 촛불투쟁 때 ‘아무 것도 하지마라!’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겠는가?

○ 흔히들 이명박 정권에 대해 반민주 정권, 민생파탄 정권, 환경파괴(토건) 정권, 남북대결 정권이라 규정한다. 08년 DJ가 ‘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위기’를 거론한 이후, 이명박정권의 문제점으로 ‘3대 위기’가 일반화된 해석으로 수용되고 있다. 상위 소수 1%를 위한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노골화, 과거 군부독재시절로의 회귀를 연상시킬 정도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적·일방적 통치방식, 압박적 대북정책 등을 볼 때, 이런 지적과 진단은 타당해 보인다.

○ 그런데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을 관통하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핵심적인 성격규정과 이명박식의 통치가 이뤄지는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② ‘용산, 쌍차, 국회날치기 말하는 바’ - 자본권력 강화와 신자유주의 파시즘

○ 이명박정권은 전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최대한 밀어붙이면서 ‘자본권력의 강화’를 노골적이고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자본가계급의 정권’으

로서의 그 역할을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과시즘적 통치형태’ 역시 노골화하고 있는데, 과시즘화는 ‘신자유주의의 쌍생아’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 및 자본주의 경쟁논리로 전사회의 재편을 의미하는바,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억압과 배제, 탄압 강화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정권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다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남북관계(통일) 문제에서 ‘전략적 차원’에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한 자본가계급에게 있어 이미 북에 대한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전략은 기본전략으로 굳어진지 오래되었다. 문제는 그 흡수통일의 방식 - 점진적·유연한 방식인가, 대결적·압박적 방식인가 - 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이명박정권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정권 역시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규정력을 인정한 선상에서 남북화해를 추구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른 종속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점을 의미하는 바,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명박의 대북정책 역시 영향을 받아 유동화될 것이다.

○ 즉 이명박 정권의 본질적 성격규정에서 반통일성을 일차적 성격으로 규정하거나, 나열식 접근(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정권)으로는 이명박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 힘들다. 자본과 소수지배층을 위한 자본권력의 전사회적 강화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신자유주의 과시즘’이 이명박정권의 본질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용산학살’과 ‘쌍용차 투쟁’,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서 잘 드러난다. 자본을 위한 재개발,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관철, 미디어마저 거대 자본의 이윤창출처로 넘겨주고 친자본·친정권적 여론창출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모습은, 이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③ 이명박 시대의 원인과 배경;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실패와 경제공황, 그리고 위임민주주의의 위력

○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탄생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대중적 실망과 심판으로 가능했다. 오랜 기간 동안 보수수구세력과 대립/갈등관계를 맺어오고 군부독재시절 탄압을 받아오면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자유주의세력은 집권 이후 자신의 계급적 한계로 인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세력’은 ‘신’자유주의세력으로 변신(?)하였고, 신자유주의를 ‘개혁’의 이름 아래 추진하였다.

○ 민주주의주의의 일정한 진전이라는 성과는 있었으나, 이 민주주의 역시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발전하였으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악화되는 대중의 삶의 질은 ‘경제살리기를 통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명박정권의 공약에 대다수 대중이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이명박정권의 탄생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실패 위에서 가능했다.

○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명박 정권이 강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자유주의개혁세력(김대중/노무현 정권) 집권시절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것이라는 점이다. 2001년 대우자동차에서의 대량의 정리해고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폭압적 탄압은 바로 김대중정권 시절 아래, 평택 주한미군 확장이전저지투쟁에 대한 폭압적 탄압은 바로 노무현 정권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유주의세력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 (한국)경제공황이라는 상황을 맞아, 이를 더욱 노골화/강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공황을 맞아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운동과 투쟁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닦아놓은 정책기조 터전 위에 서있다.

○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위임민주주의'의 위력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이미 위임민주주의는 힘을 발휘하였다. 이명박정권 들어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되고 있는데, 국민지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 해 재보궐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통치스타일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가 대중을 대리해 그 어떤 통치를 하든, 이는 적법성을 갖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절차적·형식적·정치적 부르주아민주주의가 갖는 양면성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는 절차적·형식적 틀에 입각한 '선거심판론'과 '대중의 직접정치'를 무력화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2) '망각'과 '대중 추수주의' 사이 끼어버린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독자성

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망각의 늪

○ 이명박정권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자, 대중들 사이에 자유주의개혁세력에 대한 향수가 생겨나고 있다. 그 극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었고,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를 재생시킬 것이다. 대중들은 그럴 수 있다. '더 나은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했으나 더 한 놈이 등장'했으니 그럴만 하다. 과거에 대해서는 나쁜 기억보다 좋은 추억을 기억하려 하고, 특히나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관대해지는 법일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현상은 대중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운동,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흐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김대중 등 신자유주의세력의 계급적 본질과 행태는 망각되고, 대중의 정서에 영합한 칭송과 성과만이 부각되고 있다. 즉 망각과 대중영합 사이에서 진보운동진영 역시 헤매고 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적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할 수 있고, 더한 놈과 맞서기 위해서는 덜한 놈과 일시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지켜야할 기본원칙이 있다. 그것은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독자적 목소리와 독자적 운동이다.

② 이른바 '반MB 민주연합'의 문제점

○ 민노당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다른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열

우당의 이중대로 전락하고, 그 결과 07년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몰락과 함께 참패했다는 점을 현 정세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즉 대세화되고 있는 ‘반MB 민주연합’은 첫째,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역사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 구축의 역사였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셋째, 현 정세의 핵심대립 지점을 민주 대 반민주, 또는 통일 대 반통일의 대립구도로 설정함으로써, 87년 즈음의 정세인식과 운동내용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동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즉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자본권력 강화와 신자유주의 과시증화’에 대항하는 현시기 핵심 투쟁전선인 ‘반신자유주의(자본)/반과시증’ 전선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위임민주주의의 절대성에 근거해 이것이 반MB 선거연합 심판론과 연동될 경우, 이는 선거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대중의 직접행동을 제약할 것이다.

(3) 이 시대의 ‘진보정치’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① 진보에 대한 ‘개념규정’에 대하여

○ 우선 ‘진보개혁세력’이란 사회화된 개념에서 벗어나,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이라는 개념은 진보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하나의 세력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넘어서 노동자민중의 근본적 해방을 지향하는 것과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는 선상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 간에는 그 어떤 동질성도 없다. ‘노무현=좌파정권’이라는 규정 못지 않게 이 규정 역시 모순이다.

○ 이 시대의 ‘진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이명박 정권시대라는 한시적 규정을 넘어 ‘한국사회의 성격과 모순’에 근거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의 미발달이나 왜곡된 발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일화와 지배력 강화’로 고통받고 있다.

○ 전세계적 민생파탄,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제국주의 침략전쟁, 대대적 환경파괴, 식량위기 및 먹을거리의 안정성 위기 등은 모두 현대 자본주의 모순의 결과물이다. 즉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세계경제공황은 ‘자본주의는 공황(파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케인즈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본주의체제 틀 내에서 추진되는 모든 경제위기 타개책은 파국을 지연시키거나 더 큰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공황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법은 자본과 정부의 위기전가로 노동자민중의 삶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② 이 시대 진보는 민족주의·사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이어야

○ 민족주의 진영은 한국사회 모순의 근본원인을 분단모순(미제국주의 지배)에서 찾고 있어, 분단모순 극복과 반미민족해방을 1단계 변혁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시기 공황의 원인 역시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찾기 보다는 금융적 축적에서 찾고 있으며, 대안으로 종속적 신자본주의 경제체제 극복(자주적 경제체제 구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 입장은 한국사회의 성격(자본주의의 발달 정도와 수준, 한국국가권력의 성격 변화 등)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며, 공황에 대한 해법 역시 자주적 경제체제로 설정하면서, 반자본주의 변혁을 민족해방으로,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선 계급투쟁을 통일과 반미투쟁으로 협소화.왜곡시키고 있다. 전면적인 신자본주의 공세 아래서 남북문제를 최상위 실천과제로 뚝으로써, 진행 중인 계급투쟁을 부차적 문제로 돌리거나, 신자본주의 개혁정권에 대한 태도에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의 주체사회주의는 대안사회의 상이 될 수 없다.

○ 현시기 모든 모순이 자본주의 그 자체의 산물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극복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기 보다는, 주체역량 등을 근거로, 사민주의를 현시기 정치적 대안으로 제출하는 입장이 있다. 즉 사회주의는 비현실적이지만, '사민주의는 현실적'이라는 판단, 또는 '사민주의 → 사회주의'라는 단계론적 발상이다. 게다가 한국의 사민주의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파이나누기인 '사회연대정책'과 투쟁과 정책대안을 분리·대치시킴으로써, 선거주의와 계급성을 폐기하는 경향으로 급격히 경사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전개된 사민주의 실험은 단 한번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적이 없다. 게다가 사민주의가 서구를 중심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국내적 차원에서의 격렬한 계급투쟁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제사회주의권의 형성, 유례없는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이라는 물적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사민주의는 1980년대 이후 유럽사민주의가 보여주었듯이, 신자본주의에 대한 굴복이다.

○ 따라서 대안은 자본의 지배력 그 자체를 공격하는 운동,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이를 '사회주의 운동'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더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운동만이, 현재 전세계와 한국사회의 모순을 없앨 수 있고, 진정한 노동자민중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 진보정치운동이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는 계급모순 철폐 뿐만 아니라, 계급모순 해결로 그 해결이 담보될 수 없는 여성, 생태 문제 등을 포괄해 나가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계급모순 철폐 뿐 아니라, 성해방과 성차이의 인정, 생태주의의 실현, 차이가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지 않는 운동'으로 진보운동을 재구성해나가고 이를 지금의 운동 안에서부터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노동, 여성, 생태의 수평적 나열이나 노동중심성의 폐기가 아닌, 진보정치운동의 이념, 운동, 주체의 재구성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또한 정치경제 변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화변혁(일상생활의 변혁)을 결합함으로써,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의 변혁'을 지향해야 한다. 즉 진보정치운동 그 자체가 삶의 총체적 변화를

동반하는 대안사회적인 공동체적 운동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국제주의 관점’이다.

현대자본주의의 발달은 세계를 단일한 세계자본주의체제로 변모시켰고, 이제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된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한국자본의 아류제국주의화는 한국의 위상을 제국주의의 피해자이자 제 3세계에 대한 수탈, 착취, 억압자로 만들고 있다.

이제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은 일국 투쟁을 보완하는 차원의 국제연대를 넘어, 세계변혁의 관점에서 선 ‘국제주의’를 견지해야 하며, 반제투쟁의 의미와 내용 역시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에 대한 반대를 넘어 한국자본과 국가권력의 3세계에 대한 수탈과 억압의 반대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연대는 그 일차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이명박 시대, 진보정치세력의 역할

(1)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전망과 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한 해계모니는 꽤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되었다.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역사는 이 해계모니로부터의 자립, 독자성 구축의 역사로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96·97 총파업 때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대중적 구호로 외쳐지고, 그 결과로 민노당이 출범한 것은 그 결절점이었다. 그러나 민노당이 그 활동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다른 독자적 자기전망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 차별성이 대중적으로 희석화되었다.

더욱이 MB 정권 들어 반MB민주연합전선의 구축의 절실함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과거 행태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연대에 일차적으로 집중하는 실천이 진보정당운동 내에 횡행하고 있다. 일시적, 사안별 연대가 아닌 이명박 시대에 민주연합을 상위로 연대로 설정한다든지, 야당과의 연대를 활동의 일차적 초점으로 두는 한,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은 염원에 그치게 될 것이다.

○ 이는 연대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질적 차별을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전망을 제출하고, 이를 위해 투쟁(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DJ의 ‘3대 위기론’인식을 카피하는 것으로는, 현 한국경제의 위기와 한국사회의 모순 극복 처방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양’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간다면, 백전백패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반자본주의’ 전망 아래, ‘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대리정치(대리민주주의/위임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면서, ‘인간을 위한 생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대중의 직접적 자기권력화’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한국사

회의 체제가 노동자민중적 사회로 재편(변혁)되어야 함을 제기해 나가야 한다. 현 정세에서는 이를 위한 핵심활동과제는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와 ‘파시즘화 반대와 민주주의의 확장(민주 수호가 아닌!)’이 될 것이다.

○ 똑같이 민주와 민생을 얘기하더라도, ‘어떤’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생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목소리와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서도 남북정부에 종속된 운동이 아닌 독자적인 자기입장과 실천이 조직되어야 한다. ‘어떤 평화체제냐, 어떤 누구에 의한 통일이냐’를 담론화시켜야 하며, 한반도를 벗어난 국제적 관점에서의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 국제연대투쟁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2) “쌍차투쟁을 보면서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함을 느꼈다”

- 대중투쟁과 결합하고 대중투쟁을 반자본 변혁의 길로 선도하는 진보정당운동

○ 현시기 진보정당운동은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이를 강화/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와 유리(괴리)되어 있다. 민노당/진보신당에서 거론된 ‘운동권 정당(테모당) 이미지 탈각’ 움직임이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가 그것이다. 09년 상반기의 핵심투쟁이었던 용산투쟁과 쌍차투쟁에 대한 양대 진보정당의 대응을 보아도 그러하다. 사실상 현 정세에서 자본과 노동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었던 쌍차투쟁과 자본권력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용산학살에 대한 양대 진보정당의 대응은 양대 정당이 가진 규모와 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투쟁에 대한 결합도, 확산노력, 투쟁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 양대 투쟁을 계기로 한 변혁적(진보적)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확산 등 모두에서 그러하였다.

○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용산과 쌍차투쟁의 성패는 그 어떤 훌륭한 정책대안이나 선거 승리보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의 힘관계를 변화시키고, 진보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파쇼화의 강화와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며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정권 아래에서, 이에 맞선 기층대중의 투쟁이 얼마나 진전되고 어떻게 귀결되느냐는 전체 정세의 변화와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진보정치운동)의 진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이 땅의 진보와 변혁을 원한다는 진보정치세력이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 현장의 한 선진 노동자가 말하였다. “쌍차투쟁을 보며,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현 정세는 한 기업의 향방을 놓고도 ‘자본의 입장에 서느냐, 노동자민중의 입장의 서느냐’에 따라, 그 처방과 대안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세다. 이명박정권(자본)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진보정당세력의 대응은 후진적이며 물계급적, 안일하다.

○ 현시기 진보정치세력의 핵심 역할은 대중투쟁을 촉발하고, 진행 중인 대중투쟁에 결합하며, 이 투쟁을 반정권/반자본주의 변혁의 전망 아래 모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당 그 자체가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대중조직이 벌여놓은 ‘투쟁판에 연설자로 결합해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벗어나, 현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의 핵심요구를 가

지고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투쟁을 직접 벌여내는 활동이 절실하다.

(3) 선거주의·양날개론 극복과 대중주체의 자기권력화를 위한 활동

○ 해외의 사례도 그러하지만, 한국에서 전개된(되고 있는) 진보정당운동은 전형적인 양날개론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 ‘경제투쟁=노동조합, 정치투쟁=정당’이라는 역할분담론(양날개론)과 ‘정치투쟁(활동)=선거’라는 도식은 당과 대중 사이에 광범한 ‘정치적 대리주의’를 낳았다. 대중의 투쟁의지는 선거심판론이나 선거 시 진보정당 지지로 변질되거나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대신 해결해 줄 거라는 대리주의를 낳았다. 동전의 양면으로 진보정당운동은 투쟁하는 정당(운동정당)이라기 보다 선거정당으로서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 부르주아 정치의 정치적 대리주의와 위임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진보정당운동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 대리주의는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자기권력화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보정치의 역할의 처음과 끝은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자기권력화’가 되어야 한다. 왜인가?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변혁은 불가능하며, 대중이 자신의 권력기관을 스스로 세우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와 경험의 축적없이 대중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중의 정치적 주체화, 자기권력화를 노동현장에서, 지역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강화하는 활동, 이것이 선거활동보다 몇백배나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대중운동의 혁신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4)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활동

○ 한국의 대중운동은 위기다. 계급대중운동의 대표격인 민주노총의 위기는 그 위기가 거론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위기가 증폭되자 진보정당 운동 안에서 ‘민주노총과 거리두기’가 시도되었지만, 이는 비겁하거나 우회하려는 태도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원인을 파헤치고 혁신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최근 한국 노동운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조합주의, 대리주의, 계급성의 상실과 투쟁회피주의, 협소한 노동자주의, 관료주의 강화’다. 연이는 노동자투쟁의 패배와 운동전망의 상실 속에서, 노조가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에 근거한 노동자계급 내부의 파이나누기 주장이나 최근 쌍차투쟁 마무리과정에서 ‘강성노조가 문제’라느니, ‘정리하고 불가피론 수용론’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노동운동의 위기에 진보정당운동세력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 진보정치세력은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자본의 논리에 맞서 노동(진보)의 논리에 근거한 이데올로기 대응투쟁과 실천투쟁을 강화하도록 지원/연대하고, 대중운동 내의 협소한 조합주의와 노동자주의, 관료주의와 투쟁회피주의,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활

동을 벌여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하는 소속 당원부터 노동운동의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세워내는 활동부터 착수해 나가야 한다.

3. 단결과 통합에 대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의 입장

(1) 진보정당세력의 통합에 대하여

○ 우리는 ‘반자본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사회변혁적 투쟁정당’, ‘당원이 당활동의 실질적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당’에 동의한다면, 그 어떤 진보정치세력 및 개인과 같이 당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즉 큰 틀에서 노선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크게 망치고 단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런데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이 3분립(민족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망치면 힘이 된다, 망쳐야 한다’는 대동단결주의를 외치는 것은 각각의 정치노선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자, 다수과의 패권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각각의 노선의 대중적으로 투명하게 검증받는 구조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당이 대중조직도 아닌데,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망쳐야 한다는 논리 자체도 성립되기 힘들다.

○ 이러 면에서, 민주노총 통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진보정당세력의 통합(및 재창당) 배타적 지지방침의 유지는 실패한 과거의 실험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97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경험을 달라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배타적 지지방침은 초기 민노당결성과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민주노총과 민노당 모두에게 해악을 끼쳤을 뿐이다. 당은 대중조직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해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하였으며, 현장당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민주노총 역시 이 방침에 안주하여 ‘정치활동=선거’라는 대리주의 활동양식을 유포하면서 노조의 독자적이 정치역량 및 정치투쟁강화사업을 방기하게 되었다. 나아가 노조 내 민노당과 다른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억압하는 한편, 자본가정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각 진보정당세력이 각각의 노선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대중으로부터 지지받고 검증받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하며, 대중조직(민주노총)은 노조 내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인정하면서, 조합원들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혼란과 분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합원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다양한 정치활동 경험의 축적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2) 선거에 대하여

○ 우리는 현재 준비모임 단계이기 때문에, 10월 재보선에 대한 개입방침은 없다. 내년 지자체 선거 대응 계획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단 선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을 말하자면, 우리는 선거를 통한 집권전략을 중심에 놓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당의 집권 그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해방(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과 등치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선거는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며, 대중의 자기권력화라는 전략 아래 선거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 다가올 선거에 우리 조직이 직접 개입하든 하지 않든, 재보궐 선거나 내년 지자체 선거는 당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 선거대응, 반MB민주연합에 근거한 무원칙한 연대는 극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누구를 위한 어떤 민주주의냐’ ‘민생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핵심 화두로 하여, 이명박정권, 자유주의개혁세력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진보정치적 전망과 실체를 확산시키는 선거활동이 되어야 하며, 당선이란 목표는 그 활동의 결과물로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반신자유주의·반자본’ 연대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해야

○ 자본권력화가 강화되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는 현 정세는 그것이 수면위로 올라오든 그렇지 않든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 때 이 땅의 진보정치세력의 역할은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연대의 기치 아래 연대하고 단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투쟁을 엄호, 사수, 발전시키며, 그들의 삶과 고통에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이 직접적인 투쟁부대가 되면서, 반자본·반신자유주의·변혁의 전망이 대중의 것으로 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현시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와 단결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있다.

발제4. 진보신당

이용길 / 부대표

통합논의는 토론과 공조로 부터

1. 진보정당 분화의 이유부터 규명돼야

- 진보정치세력이 가뜩이나 힘도 미약한데 여러 조직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민주노총이 통추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각 조직들이 겸허하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정치조직 분립에 대한 답이 무조건 '통합'인 것은 아니다. 정치조직들이 서로 분립해 있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통합부터 하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법이 되지 못한다.

-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각기 독자적으로 정당 활동을 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나뉘게 된 데에도 곡절이 있고 쟁점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이들 대중정당과 사노준을 놓고 이야기해보는다면 둘 사이의 간극은 더욱 크다.

사노준이 구상하는 정당과 이들 대중정당은 조직 형태 자체가 크게 다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현재 입장 차이를 무시하고 어떻게 당장 '통합'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 진심으로 '통합'을 바란다면 오히려 이러한 역사와 입장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승리21로부터 민주노동당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화된 과정과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객관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사회당과 사노준의 입장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통합'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실현 방도를 고

민하는 것이 ‘통합’의 올바른 접근법이다.

-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민주노총은 지금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른바 ‘배타적’ 지지 방침을 전혀 변경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준에 대해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노총은 ‘통합’을 혼수하고 중재할 위치에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입장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각 조직들에게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각 조직의 성원들(당원들, 회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2. 토론과 공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 올바른 논의를 위해서는 ‘통합’이 이야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에 보다 효과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되 역사를 다시 노무현 정권 시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진하는 방향에서 맞서자는 것이다. 이유가 그렇다면, 바로 이 일을 제대로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즉,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은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조와 이를 위한 토론이다.

- 사실 진보좌파임을 내세우는 세력들을 굳이 하나의 정당으로 모아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통합’의 의미를 ‘합당’으로 기계적이고 관성적으로 못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복수의 정당, 정치조직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서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현재 최소한의 공조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 복구 재보선과 쌍용차 투쟁 과정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한 바 있고, 미디어법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창조한국당 까지 포함한 이른바 야4당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야당 공조가 ‘민주대연합’ 노선의 반복인 ‘반MB연합’ 수준에 그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서민 중심 복지 연합’, ‘경제 민주화 연합’으로서 ‘민들레 연대’를 야당 공조의 새 방향으로 제안한 바도 있다. (진보신당 토론회 <반MB연대, 이대로 좋은가?>, 2009. 8. 12).

- 우리가 민주노총 등 진보정치세력에 우호적인 대중운동, 시민사회운동에 바라는 것은 이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당 간 공조와 이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 내 각 정파 간 논의나 협상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대중정치의 현장

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게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나 민주노총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나 더 바람직한 활동 방향이다.

- 진보신당은 현재의 이러한 진보양당 공조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 어떠한 수준으로 발전 시켜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사이의 정치공학적 논의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진보정치세력 전체가 보다 발전된 방향에서 재편되는 과정의 한 일부로,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 이후의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의 한 일부로 바라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지금부터 여러 정당 및 정치조직들이 다양한 수준의 공조를 벌이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듭함으로써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토론자

외부 전문가 및 시민.사회진영 토론

* 별도 토론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무순)

- 윤태곤 프레시안 기자
- 손혁재 경기대 교수
- 장시기 민교협 상임의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1

윤태곤 / 프레시안 기자

* 별도 토론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을 메모하세요.

토론 2

손혁재 / 경기대 교수

* 별도 토론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을 메모하세요.

토론 3

장시기 / 민교협 상임의장

* 별도 토론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을 메모하세요.

토론 4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대표

* 별도 토론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을 메모하세요.

토론 5

김민영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별도 토론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을 메모하세요.